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4. 5.(금)

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,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

- 한덕수 본부장 주재「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회의 개최 -

정부는 4월 5일(금) 9시 「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(본부장: 국무총리)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▲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▲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▲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▲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.

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

4월 4일 **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**는 23,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.7% 증가,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**종합병원**은 3.7% 증가한 88,911명이다.

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,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.9% 감소,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,958명으로 2.7% 감소했다.

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(97%)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·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% 감소했다.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 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.8% 증가한 494명,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.7% 증가한 429명이다.

4월 4일 **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**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.

정부는 중환자실, 응급실,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.

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·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이송하고 있다. 집단행동 이전(2.1~2.7)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 74%,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%였으나 3월 말(3.21~3.27) 기준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%로 감소,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%로 증가하였다.

2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

정부는 어제(4월 4일)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**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***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.

* '암 진료 협력병원'은 ▲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▲수술, 방사선,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'암 적정성 평가' 등급이 1,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

47개소 중 대장암, 위암, 유방암,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,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, 기타 26개소도 ▲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, 2등급을 받았거나 ▲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진료 빈도 수가 많고 ▲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.

정부는 **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**에 혈액암, 고형암, 암 수술 등 **암 분야를 특화**하여 **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**토록 하고,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**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**할 예정이다.

3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

4월 4일 정부는 「의대교육지원 TF」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.

수도권·비수도권 **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**을 완화해나간다.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%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%이다.

정부는 '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,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.

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▲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▲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.

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, 전문학회, 수련 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4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

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, '동맹휴학'은 허가된 바 없었다.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.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, 집단행동인 '동맹휴학'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.

※ 유효 휴학 신청 4월 4일 4개교 7명, 누적 총 10,366건(재학생의 55.2%),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

한덕수 본부장은 "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.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.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"라고 말하며 "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,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성현국 (044-200-2293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진 (044-200-2294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44-202-1600)
<공동>	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	담당자	서기관	이관형 (044-202-1602)
		담당자	서기관	임영실 (044-202-1601)
		담당자	사무관	신현준 (044-202-1605)





